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추세의 특징과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가계대출은 명목국민총생산, 가처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부문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율 상승은 은행부문 여신 관련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경기하강 여파로 인한 약관대출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보험권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약관대출을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임.

■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3/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892.5조 원이며 이 중 가계대출은 840.9조 원을 차지함.
- 2/4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8.7%로 동 분기 5.0%의 증가율을 보인 명목GDP 증가율(한국은행 잠정치)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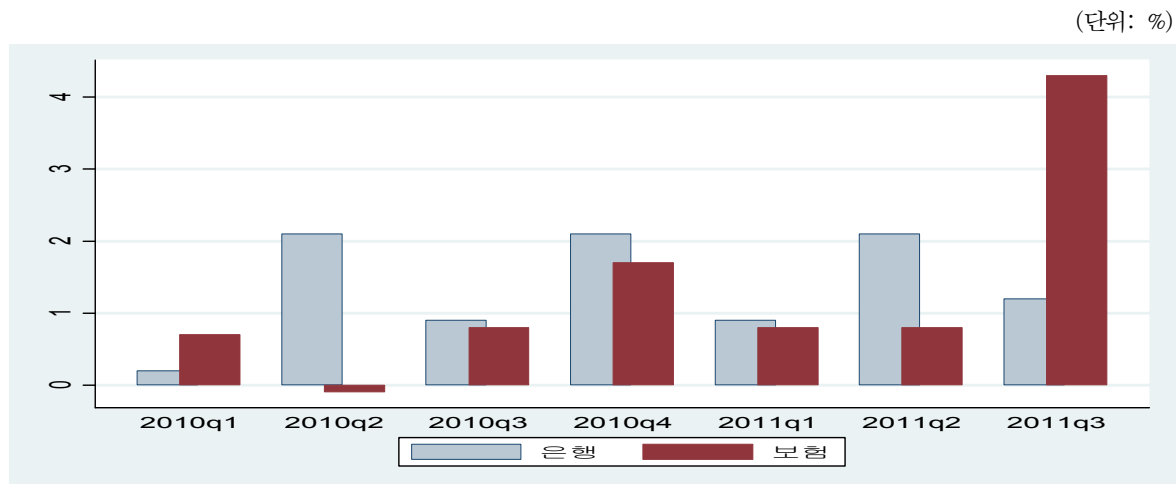
■ 한국은행에 의하면 가계대출은 1)은행권 대비 비은행권, 2)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3)저소득 계층 및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11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은행권 증가율이 8%이었던 것에 반해, 비(非)은행권 증가율은 18%였으며, 중·고소득계층 증가율이 8%였던 것에 반해 저소득계층 증가율은 50%였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1년 3/4분기에는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음.

- 3/4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전기 대비)은 1.2%로 2/4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3%로 2/4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그림 1〉 가계대출 증가율: 전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

- 아울러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약관대출, 신용대출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 2011년 11월 중 보험권 가계대출 규모는 약 68.2조원(추정)으로 작년 말 대비 9.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약 61%, 주택담보대출은 약 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표 1〉 2011년 보험권 가계대출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가계대출	63.0	62.9	63.2	63.8	64.5	65.9	66.8	67.4	68.2
주택담보대출	19.5	19.2	19.2	19.4	19.7	20.2	20.7	20.7	21.2
약관대출	38.5	38.6	39.0	39.3	39.6	40.4	40.8	41.2	41.7

주: 11월은 추정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진 것은 은행권 여신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가계대출이 은행권으로부터 보험권으로 이전)가 나타났기 때문임.

- 금융당국은 올해 6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함.
 -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함.
 - 예대출(100% 이하) 준수기간을 2013년 말에서 2012년 6월로 단축함.
- 이러한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나 보험권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를 초래함.

■ 또한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감소가 보험약관대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약관대출은 경기가 하강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가계대출연체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적금 또는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도 증가함.

■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약관대출 규모는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약 11%, 손해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약 5-6%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약관대출 비중을 확대할 여력이 존재함.
 - 단, 약관대출 가용규모는 표준해약환급금에 비례하지 책임준비금에 연동된 것은 아니나 7년 이상의 경우 가용약관대출규모는 책임준비금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보험권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이므로 보험권 가계대출 관련 규제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ri](#)